

16일 Market Index			
↑ 코스피	8726.60	↑ 코스닥	1018.68
	(+180.62)		(-15.35)
↓ 금리 (연이자율)	3.717	↓ 환율 (원/달러)	1509.05
	(-0.027)		(-2.05)

metro 경제

USD/KRW
1,511.90
Hana Bank
▲ 0.80 (0.05%)
02

글로벌 일상식 된 K-푸드... 영토 확장전략 공유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본지, 오늘 오후 2시 페럼타워 개최 'K-food, 세계인의 먹거리' 주제 농식품부 유재형, 해수부 박수영 수출 확대 전략·정책 방향성 제시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며 글로벌 식문화의 새로운 주류로 당당히 자리 잡은 'K-푸드(K-Food)'.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계인이 매일 즐기는 일상식으로 진화한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지식과 교류의 장이 열린다.

메트로경제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1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 고유의 맛과 건강한 식문화를 담아 전 세계 유수의 마켓과 식탁을 사로잡은 국내 대표 식품기업들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토 확장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기사 L8면>**

최근 K-푸드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전통적인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중국·일본을 넘어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중남미까지 전 세계 208개국으로 수출길이 넓어졌다. 라면, 소스류, 쌀가공 식품뿐만 아니라 딸기, 포도, 배, 인삼, 한우 등 신선 농축산물까지 품목도 한층 다양해졌다. 특히 지난 1월 미국 정부가 '미국인을 위한 식이지침'을 통해 한국의 김치를 건강식품으로 공식 소개하며 자국민에게 섭취를 권장하는 등 K-푸드의 글로벌 위상은 한 단계 더 도약했다는 평가



잠실 개표소 진입 대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다 한 집회 참가자가 막아서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를 받는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열리는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은 정부의 정책 방향부터 글로벌 선도 기업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까지 총망라하는 다채로운 강연으로 꾸며진다. 첫 세션에서는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나서 K-푸드의 외연 확장을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을 공개한다. 유재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식산업과장이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박수영 해양수산부 수출과공진흥과 사무관이 '2026 수산식품 수출전략'을 발표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및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기업 세션에서는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대표 식품 기업들의 성공 방정식이 베일을 벗는다. 한국 식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화에 성공한 비결과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독창적인 제품 개발 스토리가 중심이 된다. 정찬기 대상 글로벌김치마케팅팀장이 '종가, 식품업계의 하이닉스를 꿈꾸다'를 주제로 전 세계에 김치 열풍을 일으킨 '종가(JONGGA)'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과 비전을 공유한다. 뒤이어 윤명량 풀무원 글로벌마케팅 총괄본부장이 '글로벌 K-Food 트렌드와 지속가능 식품의 미래'를 통해 바른 먹

거리를 넘어 글로벌 지속가능 식품 시장을 선도하는 풀무원의 혁신 DNA를 소개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K-푸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떻게 견인할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전망도 제시된다. 안병익 식신대표가 '식신 AI 데이터로 본 외국인 찾는 K푸드' 발표를 통해 실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외국인 소비자의 취향과 트렌드를 정밀 분석하며, 연운열 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이 'AI와 푸드테크가 만드는 K-푸드 2.0'에 대해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격돌 勞 "차별과 낙인" 使 "생존 사다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변수로 중 하나인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 간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붕괴를 막을 '생존의 사다리'라며 도입을 강하게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가 적용된 것은 최저임금법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뿐이다. 이후에는 업종별 기준 마련의 모호성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30년 넘게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있었다.

최임위, 전원회의서 심의 착수 경총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1분기 매출 356조... 경영난 심각" 노동계 "차별·불평등 심화시켜 업종별 적용, 지금 당장 폐지돼야"

사용자위문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이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올해 1분기 말 매출 잔액이 약 35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현장의 심각한 경영난을 짚었다. 류 전무는 "업종별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하나의 기준만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져올 부작용과 불평등 심화를 경고하며 전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근로자위문간사인 류기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같은 곳에 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하려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 장애인 수습 노동자 등에게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고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면서 "공약위원들 또한 이러한 반노동적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가려지면 최임위는 곧바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조율 아리는 본계임에 들어가게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

개인회생·파산 1년 새 최대... 빚투족 상환 한계 '비상'

법원, 4월 개인파산 접수 3625건 개인회생 1.5만건, 2년여 만에 최대 생계형 채무 증가, 투자실패 원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식 시장 상승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까지 겹쳐 개인회생·파산 신청 건수가 1년 새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에 주식 투자 실패까지 더해져서다. 금융권에서는 가계 부채의 질 악화와 잠재 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지난 4월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3625건,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만5117건

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지난 2024년 2월 1만169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 동안 일부 채무를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할 때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다.

최근 개인회생 증가 배경으로는 경기 둔화에 따른 생계형 채무 증가와 함께 주식·가상자산 투자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증시 상승 흐름 속에서 뒤늦게 투자에 뛰어들어 개인투자자들이

대출이나 신용융자를 활용해 투자 규모를 키웠다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식·코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다. 고정적인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라도 회생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빚투 열기는 금융권 대출 증가 흐름에서도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5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8조1000억원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2조6000억원 늘었다. 특

히 상호금융권 대출 증가 폭이 11조원으로 가장 컸고, 보험업권은 1조원, 여신전문금융사는 6000억원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투자 목적의 자금 수요가 확대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자산 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경우 원금 손실뿐 아니라 이자 부담까지 동시에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 주식 투자자는 신용융자를 활용할 경우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위험에 노출된다.

<2면에 계속>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 ▲ 김 총리 "국민 참정권과 함께 민주질서도 보호해야... 시위 불법행위 일벌백계" **<사진 뉴시스>**
- ▲ 대통령기록관, '세월호 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 ▲ 서울시선관위, '투표지 부족' 다음 날 새벽에야 첫 회의
- ▲ '서해 피격 은폐' 서훈 2심도 무죄... '허위야나'

- ▲ 서울 물가 2% 초반대 깨졌다... 상품·서비스 동반 상승세
- ▲ 오세훈 "재선거 주장 소모적"... 장동혁 공개 비판